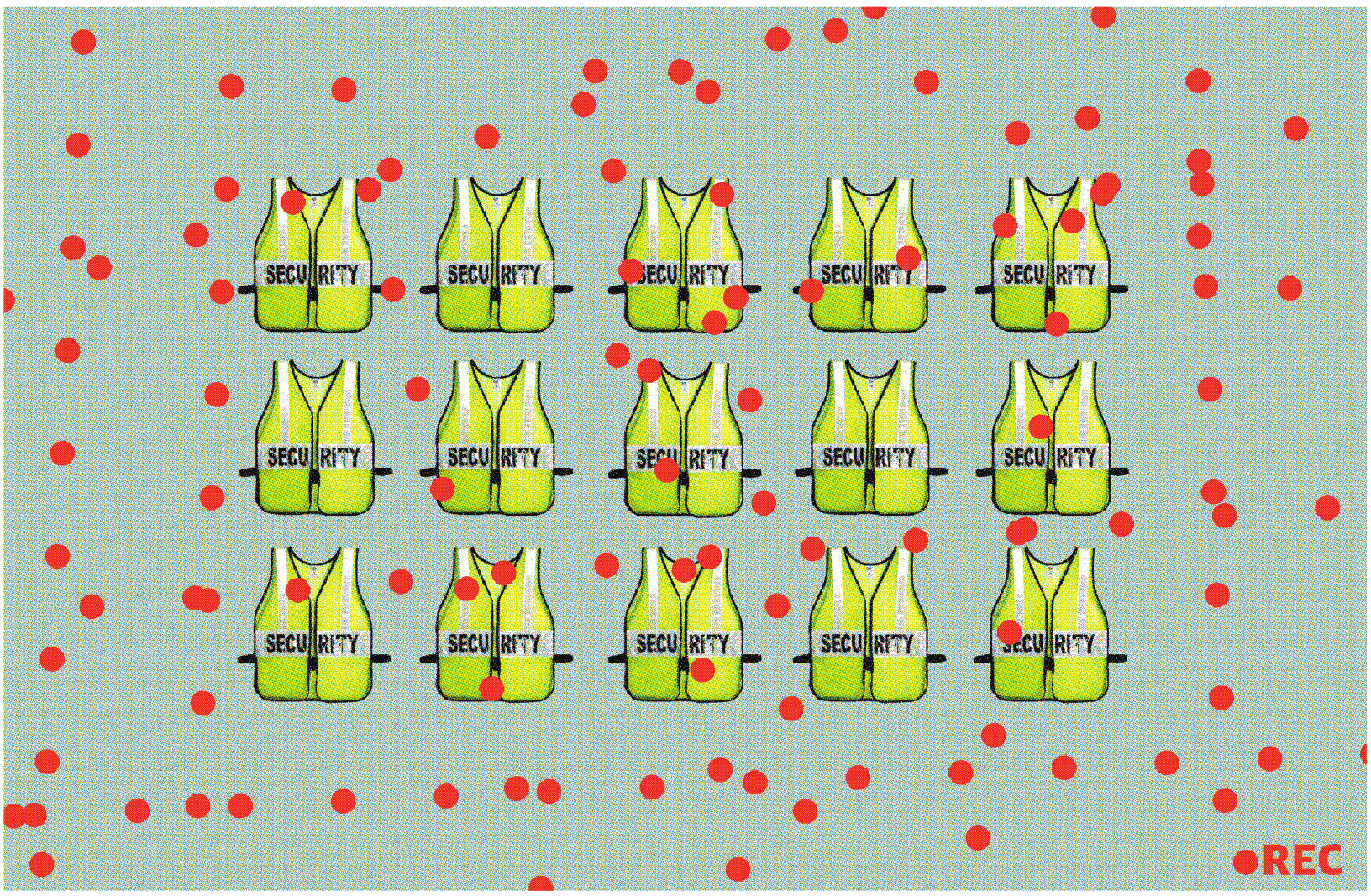
서강대학원신문

133

2015년 6월 1일

발행인 유기풍 총장 | 편집인 겸 주간 계승범 | 편집장 채다희
(우편번호 121-742)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1번지 | 엠마오관 B133호 대학원신문사
전화 705-8269 팩스 713-1919 | 제작 일탈기획(070-4404-8447)



G.VEST, 2015, 홍한나

안전을 가장한 감시

얼마 전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종이로 가렸다. 작동하지 않는 카메라이지만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문득 카메라와 눈을 맞추는 느낌이 들면서 '파놉티콘'을 떠올렸다.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요즘이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수많은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한다. 심지어 나도 모르게 사적 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것이 안전을 위해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인지 안전으로 포장된 교묘한 감시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안전한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는 것을 안전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안전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편집장 **채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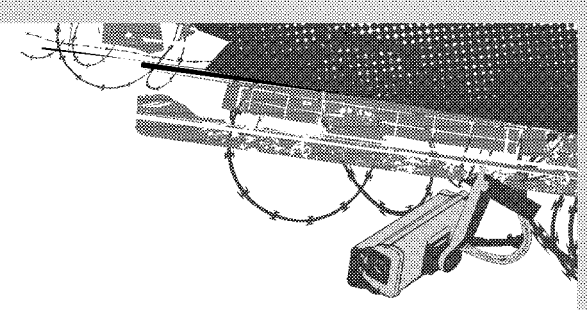
지 면 안 내

서강대학원신문 홈페이지 http://sggpaper.tistory.com/
이메일 sggpaper@hanmail.net

〈기획〉 안전과 감시

2-3면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자발적 감시의 시대
4-5면 디지털 파놉티콘으로서 전자감시제도의 부정성
6면 안전한 사회인가 통제의 사회인가?
7면 주민등록제도와 총체적 감시사회

8-9면 인터뷰 • 건축가 하태석 인터뷰
10-11면 특 집 • 서강대학교, 서강대학원 총학생회 라운드 테이블
12면 기 고 •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
13면 서강논문상 • 김성모_ 정외과 석사과정
• 이천우_ 사학과 박사과정
14-15면 연구/세미나 • 동아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서강차이나 포럼
• 생명문화연구소 봄철 정기 학술대회
16면 포 토 • 원우한마당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자발적 감시의 시대[1)]

이희은 _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

2010년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이제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욱 많은 정보를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사생활이 은밀하게 그러나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주커버그의 말이 과장만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2013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에서 주커버그는 자신이 했던 말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여준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침 출근길의 주커버그에게 다가가 "정말 더 이상 프라이버시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주커버그의 첫 대답은 "이거 촬영하는 겁니까? 카메라 좀 꺼주시겠어요?"였다. 결국 프라이버시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주도하는 그에게도 프라이버시란 여전히 중요했던 것이다.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일상적으로 전화와 인터넷과 SNS 등을 사용하며 스스로 사적 정보를 노출하는 일, 즉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일에 익숙하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즐거운 일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교 주변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보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믿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선택하는 자유와 개인에 대한 감시가 공존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보여주는 모순적인 협력관계의 전형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가 후퇴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국가 주권의 축소라기보다는 또 다른 방식의 통치의 확장으로 보아야 한다. 통치기술의 변화는 공식적인 것에서 비공식적인 것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행위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신자유주의의 비밀 극장

그 행위자 중의 하나로 미디어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관찰 카메라를 통해 사적 영역을 스펙터클로 만들며 오락성과 자기계발을 함께 강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다. 닉 콜드리(Nick Couldry)는 오늘날의 텔레비전이 "신자유주의의 비밀 극장" 역할을 담당한다고 지적한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가장 사적인 삶의 공간 내에서도 외부의 감시와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든다는 점 때문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구분이 점차 무의미해지면서, 공적 영역의 권위와 책임과 의무는 점점 알팍해지고 사적 영역의 개인성과 자율성은 점차 상품화되어간다. 공적 영역에 대한 사회 감시 기능은 시들해지고, 대신 사회생활의 교과서이자 자기계발서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푸코의 '훈육 사회'나 들뢰즈의 '감시 사회'처럼 전 지구적인 감시체계의 확산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텔레비전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행해지는 감시는 일상에 편재한 만큼이나 자발적인 감시의 형식을 띤다는 면에서 이전의 감시사회 논의와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상호작용성이라는 미명하에 자발적으로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오늘날의 자발적 감시사회가 보여주는 역설이 드러난다. 푸코의 파놉티콘이 감시의 목적과 주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반면 오늘날의 감시는 그 목적과 주체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근대적인 감시체제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되지만 오늘날의 감시체제는 쉽게 의식하지 못하거나 순응하게 된다. 전통적인 감시사회가 주로 불안과 위험과 공포를 토대로 작동했다면, 신자유주의 감시사회는 안전과 효율성과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한다. 국가나 권력이 현재의 불안을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근대적 감시 체계로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켜켜이 쌓아 나가는 감시 체계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그문트 바우만과 데이비드 라이언(Bauman & Lyon)은 현대적 감시 사회를 단순히 빅브라더의 사회적 통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감시 주체는 불분명해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감시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바람 잘 날 없는 가족이라도 적절한 감시와 반성을 통해 좋은 가정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적절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공포도 준다.

사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인 '관찰 카메라'라는 말은 이미 동어반복이다. 그럼에도 이 말이 통용되는 이유는 '관찰'이라는 것이 편집이나 인위적인 처리를 배제한 형식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자면 관찰 카메라는 미디어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형식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텔레비전은 신자유주의를 스펙터클로 전시하는 "비밀 극장"의 역할을 하며, 그 중에서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관찰 당하는 일(the work of being watched)" 자체를 생산력이자 생산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인클로저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자유를 얻은 대신 생산 수단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현대의 디지털 인클로저는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자유와 즐거움을 주었으나 자기 스스로도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일감을 주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자발적 감시 체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관찰을 빙자한 감시 체계는 '보이는 동시에 보기'라는 암묵적인 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누구도 이 체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런데도 평범한 개인들은 자기 자신만은 그 체계에서 예외일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송 장치 혹은 관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장치는 유명인의 활용이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명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독거의 삶(〈나 혼자 산다〉), 결혼의 삶(〈자기야-백년손님〉), 육아의 삶(〈슈퍼맨이 돌아왔다〉, 〈오 마이 베이비〉), 교육의 삶(〈학교 다녀왔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삶(〈엄마를 부탁해〉), 가족의 삶(〈아빠를 부탁해〉), 군대의 삶(〈진짜 사나이〉) 등 인생의 주요 순간들이 유명인들에 의해 시각적으로 재현될 때, 그 삶은 나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나의 삶과는 달라 보이는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두 번째 장치는 가족과 가정 담론이다. 관찰 예능의 출연진은 모두 실제 가족이거나 유사 가족의 형태를 띤다. 실제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최소한 나이나 계급 서열이라도 따져서 가족의 형색을 갖추려 한다. 이는 출연자들이 시청자들과는 무관한 '남'임을(즉, 다른 가족의 일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1) 이 글은 필자의 "관찰 혹은 자발적 감시: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감시사회의 정경"(〈한국방송학보〉, 28(2), 2014)의 발췌요약문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임.

그들의 모습이 진실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

세 번째 장치는 내레이션과 인터뷰의 활용이다. 출연자들이 카메라 앞에 앉아 제작진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은 이 관찰이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출연자 스스로도 주체적인 참여 의지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나 자막의 활용은 내가 보고 있는 관찰 내용이 몰래 엿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 당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지우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타인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것은 그의 눈이 될 것인가 혹은 그에게 눈길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선택 문제다. 즉 출연자의 표현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관찰도구가 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방송 중인 관찰형 프로그램들은 이 둘 사이를 오간다. 출연자들은 관찰의 대상이 되어 눈길을 받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눈으로 본 세상을 카메라를 통해 드러낸다. 아이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쓰인 자막이나, 고백 형식의 개인 인터뷰, 출연자의 실제 가족의 등장 등이 모두 그런 장치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주체가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카메라가 관찰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타자임을 인식하게 된다. 관찰이 감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렇게 잊혀 가거나 감추어진다.

일단 관찰의 체계에서 감시의 의혹을 걷어내고 나면, 관찰의 행위에 따르는 부담은 적어진다. 더군다나 타자의 모습에서 가족의 일반형을 발견하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부족함과 가능성을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는 더욱 그렇다. 관찰 예능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개인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타자를 관찰하는 일이 안전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한다.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가올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러한 덕목은 신자유주의의 일상을 구성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 탄생한 자기 경영 혹은 자기 관리라는 원리는 반성, 혁신, 자유 등의 인문학적 단어들을 취함으로써 자기의 출생을 숨긴다. 삶은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므로 기계처럼 일하지 말고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엄격한 통제를 받는 학교나 군대 등의 근대적 훈육 장치를 거부하고 자율적인 자기혁신을 통해 가치를 생산하라고 부추긴다. 이는 오늘날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하는 자기계발의 논리이기도 하다.

관찰이라는 자기계발서의 역설 : 사적 영역이 없는 개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찰 형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가장 사적인 가족의 공간 내에도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일반적인 리얼리티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기계발의 논리가 전달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그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의 보호나 프라이버시의 보장은 지켜주지 못한다는 역설이다. 이 역설은 프로그램 내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된다. 하나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사회 조직 속으로 들어가는 설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사적 영역이나 프라이버시를 기꺼이 공적 영역에 양도하는 모습이다. 이 두 방식은 일반적인 자기계발의 논리와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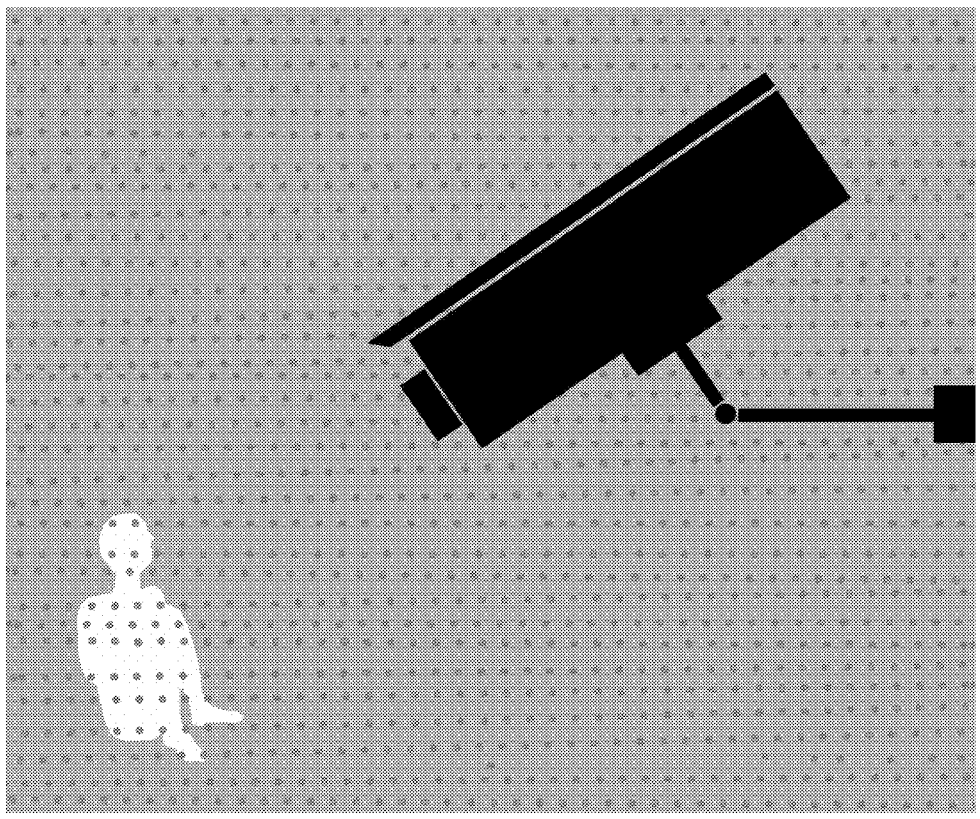
우선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그동안 자기계발의 논리가 거부해 오던 통제 조직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다는 특징을 보인다. 군대 체험을 하는 〈진짜 사나이〉, 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등이 눈에 띄는 사례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사회 기구인 가족 속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찰 카메라가 제시하는 자기계발 논리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즉 사생활의 축소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개인의 정보를 경제적인 자원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에 따르면 프라이버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다. 그는 프라이버시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격리하여 자신을 선별적으로 드러내는 능력"이며, "안전의 한 측면"이라고 정의한다(Bauman, 2011/2013, 130쪽).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모든 것을 사적 영역이라고 볼 때, 공적 영역은 프라이버시가 작동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고 거래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작동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는 권력이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더 많이 개방되어 있으며 접근권에 있어서도 전혀 공평하지 않다.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통은 개인들 사이의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의 판타지로 덮여 버리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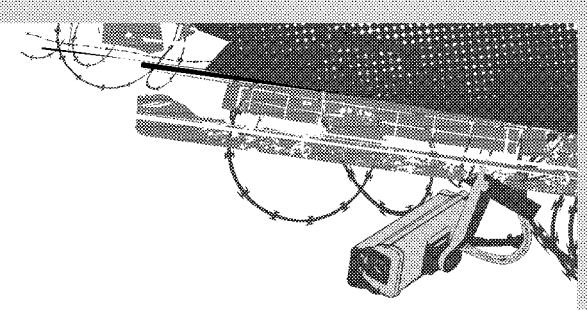
그렇다면 사적 영역으로 카메라를 들이고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면서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관찰 예능의 '교훈'은 무엇일까. 아르망 마틀라르(Armand Mattelart)는 노동현장과 정보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감시 체계가 우리에게 일종의 자기 억압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관찰 예능의 특징과 한국적인 감시 사회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자기 억압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모범으로 제시하는 개인이란 감정을 절제하고 노동 강도를 높이며 사회 조직을 위해서라면 강요된 참여에도 스스로 복종하는, 그러면서도 타인의 시선에 의해 목표가 달성된다는 점에서 불안정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출연자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시청자도 자기 스스로에게 대입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게 한다. 이 억압 기제를 조금 더 '따뜻한' 모습의 스펙터클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틀과 반성이라는 개인의 자기감시다. 문강형준은 경쟁 서사를 중심으로 한 〈슈퍼스타 K2〉에서 그 누구도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참여자들이 내가 부족한 탓이니 열심히 해서 희망을 갖겠다고 말하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환상적으로 봉합된다고 평가한다. 결국 〈슈퍼스타 K2〉는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낸 자기계발 드라마였다는 것이다(문강형준, 2012).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이러한 개인적 반성 서사에 가족 혹은 집단이라는 서사가 덧붙여지면서 한층 더 정교한 감시체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마치 텔레비전 판 자기계발 드라마처럼 작동한다. 개인의 혼자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족이나 집단과 비슷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판타지를 생산하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몸매 가꾸기, 요리하기 등에서부터 어떻게 아이를 기르고 훈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식과 적절치 않은 방식을 보여주며 가르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일상적으로 시연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실 가족, 군대, 여행은 사실 매우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직의 구조보다는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개인의 모습만을 기억에 남기게 된다.

사람들은 사회적 조건이 나빠지고 삶이 고단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판타지를 버리지 못한다. 사회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커지지만, 그런 개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라고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메시지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정된 직업이나 성공적인 삶 혹은 사회적인 정의와 공정성 등의 가치를 외치면서 '희망적인 삶'이라는 이룰 수 없는 꿈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적인 삶은 그것이 '리얼'한 것처럼 보일 때에만 간신히 설득력을 띤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현실에서의 희망의 끈이 그만큼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G.CAMERA, 2015, 홍한나



디지털 파놉티콘으로서 전자감시제도의 부정성

윤영철 _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과학기술의 양면성 – 디지털 감시사회의 등장

현대사회는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으로 만끽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특히 디지털 혁명이나 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인해 상호 관련된 정보를 한 곳으로 집적할 수 있는 디지털 컨버전시(digital convergency)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컨버전시에 네트워킹을 결합하면서 우리사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통신환경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의 편익을 구현하는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사회를 과학기술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양면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은 편의성과 신속성, 효율성과 경제성, 자동화와 안전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반면에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예컨대 물질만능주의, 위험성의 일상화, 인간존엄성의 형해화, 비인격화로 인한 획일화 경향, 감시의 일상화,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노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디지털 전자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의미의 유비쿼터스 사회는 다른 한편으로는 전방위적 감시가 일상화되는 디지털 감시사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에서의 IT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구성원을 서로 네트워크화하여 상호 활발하게 소통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전방위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파놉티콘, 즉 디지털 파놉티콘의 도래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국가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게 최소한으로 유보하여 국가를 형성하고 법규범을 제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 즉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성, 즉 자유를 보장해주는 수단이므로, 국가는 인간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갖게 되어 인간에 대한 국가의 지배는 오로지 인간에 대한 봉사라는 점에서만 그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기능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상태를 형성해야 하는 형성기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삶을 강요하는 모든 법적 상태를 배제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법적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가진다.

그리고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 스스로 목적을 정립하는 존재, 즉 자기입법의 기획을 통해 자신의 인간 존재를 형성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바로 자기입법의 기획을 통해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존재자의 존재가능조건이 된다. 따라서 국가와 법을 통해 모든 인간 질서를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게 자유질서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을 동물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이성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법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목적 그 자체, 즉 스스로 목적을 정립하는 존재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정신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은 물론 사회의 관점에서도 각 개인이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의 질서를 통해 개인의 개별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상호적 자유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목적 그 자체인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개인으로서의 인간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수단, 즉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처벌에서 감시로의 전환

형벌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 이전에는 처벌을 할 때 신체형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신체형은 본질적으로 범죄인의 신체에 물리적 폭력을 가하여 절대 권력의 위엄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심리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과정으로써 본보기적 징벌의 원칙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나 신체형의 잔혹성이나 비효율성에 대한 계몽주의의 비판으로 인해 신체형은 점차로 인도적인 자유형으로 전환되었다. 신체형과 달리 자유형은 합리적인 계산에 입각한 효과적인 징벌의 원칙, 즉 최소분량의 원칙, 관념성 충족의 원칙, 측면적 효과의 원칙, 완벽한 확실성의 원칙, 보편적인 진실의 원칙, 최상의 특성화 원칙에 따라 인간의 정신에 작용하는 형벌이다. 신체형이 범죄에 대한 응보적 처벌에 중점을 두었다면, 자유형은 범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놓고 감시하는 효율적인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체형이 자유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바로 처벌이 효율적인 감시에 의한 통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최적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다름 아닌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담(Jeremy Bentham)이 주장한 '파놉티콘'(Panopticon)이다. 파놉티콘에 의해 범죄인을 관리하는 방식은 공리주의적 비용효과이론에 입각한 감시방식이다. 파놉티콘이라는 효율적인 감시 장치에 의해 인간과 사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회를 규율사회라고 한다. 규율사회에서는 파놉티콘적 통제의 대상이 규율사회의 전형적인 영역인 감옥, 공장, 정신병자 수용소, 병원, 학교 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감시가 요구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규율사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시에 의해 권력과 통제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체형이 자유형으로 전환되면서 형벌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완화되었지만, 반면에 형벌을 통한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는 점차로 강화되었다. 즉 형벌이 물리적 폭력에서 심리적 강제로 전환된 것이다.

비인간적 통제장치로서의 전자감시제도

앞에서 언급되었던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형법영역에서도 범죄예방이나 재범방지에 첨단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는 범죄나 범죄인으로부터 국민의 법익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나 범죄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에 의한 범죄통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첨단과학기술은 형벌 자체보다는 오히려 범죄 또는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과 쉽게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관한 예로는 특정범죄인의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인에 대한 화학적 거세, 특정범죄인에 대한 전자감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컴퓨터기술, 정보통신기술, 전자기술 등의 첨단과학기술이 감시제도에 접목된 것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전자감시장치를 이용하여 사회의 자유공간을 자유가 억압된 통제공간으로 만드는 범죄영역에서의 디지털 파놉티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현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임)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전자감시제도를 특정범죄인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로 그 대상범죄를 확대해가고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전자감시기간의 상한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는 위성을 통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기반하는 위치추적전자장비를 이용한다. 위치추적전자장비는 발목에 전자위치추적장치 – 일명 전자발찌 – 를 착용한 감시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고, 위치추적센터에서는 통제요원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된 위치정보를 통하여 감시대상자의 이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현재 위치정보를 포함한 시점별 위치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한다.

전자감시제도와 관련하여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완화, 구금비용의 절감, 과중한 교정업무의 완화, 구금 없이 구금의 목적 달성 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보안처분이 아닌 형벌로서의 전자감시일 경우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한 형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보안처분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자유보장보다는 철저히 사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방위이론과 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는 예컨대 평등원칙의 위배문제, 인권침해의 문제, 이중처벌의 문제, 비례성원칙의 위배문제, 형사사법에 의한 사회통제망의 확대문제 등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형기종료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오히려 범죄인이 다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첨단전자기술을 이용한 범죄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규제로 인해 심각한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침해문제를 야기한다.

전자감시제도는 우리사회가 사회의 안전을 사회의 최고가치로 간주하는 고도의 규율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율사회에서는 사회 안전의 필요성을 빌미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가 합리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안전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안전감옥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자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하는 인간이 단순히 사회 안전을 위한 수단, 즉 비인격적 객체로 전락하게 되어 인간존엄성의 상실이 나타나게 된다.

PH.BETWEEN2.VA, 2014, 홍한나

나가는 말

벤담이 주장한 파놉티콘은 격리와 고립 그리고 이를 통한 교화에 기초하는 효율적인 감시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교화는 기본적으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인격적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의미에서 벤담의 파놉티콘은 어느 정도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디지털 파놉티콘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는 오로지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감시만 있을 뿐이며, 그 어디에서도 교화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전자감시제도의 교화적 의미는 그의 사회적 낙인효과와 그로 인한 재사회화의 방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무의미해진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이고 그 자체로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므로, 인간은 범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평등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도에서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오직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비인격적 객체로서의 인간상만이 보일 뿐이다. 그리고 자유와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사회를 안전감옥, 즉 파놉티콘으로 전락시키는 전자감시제도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더 이상 자유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철저한 감시로 인해 자유의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규율사회는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인 행동의 자유가 제거된 비인간적 통제사회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놉티콘으로서 전자감시제도는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에 기인하므로 도덕적 주체인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효율성의 도구인 경제적 객체로서의 인간만이 있을 뿐이다. 전자감시제도 하에서 특정범죄인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전자감시대상자는 자기 자신이 바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가진 인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인간임을 성찰할 수 없다. 그는 오히려 전방위적 감시와 통제의 불안 속에서 대중 사이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존재로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여 표류하는 정신이 없는 비인격체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사회공동체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구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를 볼모로 하는 전자감시제도는 근본적으로 단순한 사회의 안전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보장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본질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시민으로서의 저항정신을 다시 되살려 디지털 파놉티콘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여 안전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의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의 자유를 볼모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국가의 전략적 권력구상에 대한 시민의 자유공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저항만이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것이다.

2015년 서강대학원신문 신입 편집위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2015년 8월 24일(월) ~ 8월 30일(일)

□ **자격요건** 석사 과정 1, 2학기 **(연속으로 3학기 활동이 가능한 자)**

□ **접수요건** 메일로 아래 내용 첨부

(1)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2장 내외, 자유 형식)

(2) 논평 또는 에세이 1편 (A4 용지 2장 내외, 자유 형식)

□ **심사과정** 서류 심사 → 인터뷰 → 수습 기간(1학기) 후 편집위원 선발

□ **혜택** (1) 장학금

(2) 신문사 편집실 이용 (개인 공간 제공)

□ **문의사항 및 지원 접수**

서강대학원신문 이메일(sggpaper@hanmail.net)

안전한 사회인가 통제의 사회인가?

구윤희 _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교수

일망감시 체계와 CCTV

일망감시의 구조는 영국의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근대적 감옥으로 파놉티콘(Panopticon)은 수감 형태인 감옥의 기능을 감시의 기능으로 바꾸어 놓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기능은 현대의 일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파놉티콘의 건축형태를 사회구조의 시선권력과 비교하여 일망감시시설을 통한 시선의 내면화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양면성의 권력관계를 통해 사회를 분석한다. 판옵티콘 속의 죄수들은 간수들을 볼 수 없지만 자신은 항상 노출됨으로써 간수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내재화 한다. 이 내재화를 통해 죄수는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발적으로 훈육된다. 현대판 일망감시 체계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TV)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인의 생활에 일반화 된 CCTV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었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개인 인권침해 및 사생활보장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얼마 전에 세상을 경악시켰던 어린이집 영아 폭행사건이 국회에서 어린이집 내에 CCTV 설치 의무화를 공론화하기도 하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 여성들이 밤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CCTV 209대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한다고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설치한 CCTV 숫자만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2만2,679대에 이른다.

정보 노출의 내재화 사회

파놉티콘은 규율권력을 만들고 이 권력은 인간이란 객체를 가시화하여 통제하기 쉬운 존재로 만든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파놉티콘은 정보통신기술의 속성인 흔적을 남겨주는 특징과 연관되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권력으로 자리 잡아 간다. 디지털경제 시대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일망감시 체계를 다망감시 체계로 바꾸어 놓았다. 다망감시 체계의 사례는 스마트카드(smart card), Web의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한 방문자 통계, 웹 사이트 회원가입 등이다. 정보통신기술로 현대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를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소통의 자유화는 보다 많은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활용한다.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마크 포스터(Mark Poster)에 의하면 "오늘날 〈통신망〉과 그것이 산출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초(super) 파놉티콘은 슈퍼 파놉티콘을 말한다. 요컨대 벽과 창문, 망루나 감시자가 없는 감시체계를 이룬다. 감시기술의 양적 증대는 권력의 미시물리(微視 物理; microphysics)라는 질적 변동을 초래한다. 그러나 기술의 변천은 그러한 변동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대중은 앞서의 질적 변동의 과정에서 감시에 길들여지고 참여하도록 규율되어진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도시의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사람들은 정보와 혜택을 얻고자 자신도 모르게 매순간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자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활용당하는 현대의 시스템을 '슈퍼 파놉티콘' 이라고 한다.

동적인 감시

① 스마트카드와 다망감시

스마트카드(smart card)란 IC(integrated circuit: 집적회로) 기억소자를 장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식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은행카드, 신용카드, 하이패스카드 등 그 사용이 다양하다. 칩이 내장된 카드를 사용하면 자신의 동적인 이동이나 소비패턴 등이 사용 기록으로 남는다. 동전을 거스르지 않는 편리함 대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노출시키는 것이다.

②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를 통한 다망감시

2009년 10월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의무적으로 도내에 모든 애완견 몸에게 위치추적 칩을 심어 미아견을 방지하도록 공표하였다. 애완견 소유자는 15자리의 고유번호가 새겨진 마이크로 칩을 주사기를 통해 개의 목덜미에 주입한 뒤,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위탁대행자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RFID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치추적 시스템은 일상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만일 이것이 인간에게 활용된다면 사생활 침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비록 치매노인이나 어린이 미아방지에 사용한다면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파놉티콘의 세상에 갇히게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습으로 어린이들의 활동범위가 증가하고 어머니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의 위치 추적 가능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휴대폰의 위치 알림 기능은 어린이가 휴대폰을 분실하였거나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RFID의 인체 이식은 수술에 의한 제거가 아니면 어디서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상업적 또는 반인간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그 문제는 심각할 것이다.

③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경우 인공위성과 단말기를 통해 이동위치가 모두 기록되어 이제는 범죄수사에 활용되기도 한다. 내비게이션 등 차량안내를 해주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도 경찰 수사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복폭행' 사건 당시 남대문 경찰서는 CCTV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의자의 차량에 장착된 GPS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 당일 행선지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는 정보통신의 순기능이지만 내비게이션 사용자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주행기록들이 모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사용자의 목적지에 대한 정보는 필요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용자는 그 기록자체가 어떤 데이터가 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 같은 사용기록들이 DB화되어 개인기록으로 남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다망감시

①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CMS라 함은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일반적으로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포맷의 컨텐츠인 문서, 이미지, 동영상, 소리 등을 제작, 출판,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보통 컨텐츠 생성, 출판, 배포, 보관 등으로 정리되는 컨텐츠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CMS의 권력관계에서 사용자의 선택 유·무 자체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사이트 방문자는 CMS 시스템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접근경로, 접근이력사항 등이 비밀리에 노출된다. 사용자의 방문정보는 CMS를 통해 기업의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어떠한 동의절차도 없이 시행되는 일종의 시스템적 권력' 이다. 사용자는 포털 사이트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오락거리를 제공 받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수집행위와 취향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② 웹 사이트 회원가입과 인터넷 쇼핑

웹 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과 구매행위 등 다양한 지적, 경제적 활동이 일반화된 지금 웹 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한 정보의 노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가입과 동시에 공개하지만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 노출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회원가입 후 자신의 아이디(ID)로 정보수집 및 구매행위가 일어날 경우 개인의 취향과 소비행위는 더욱 적나라하게 기록된다. 이러한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에 대한 정보는 이전에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또 하나의 개인정보로써 개인의 공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정보까지도 슈퍼판옵티콘의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마존, 교보문고의 경우도 구매한 책들과 구매하고 싶은 책들을 스크랩해 놓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은 북로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업은 고객의 구매 패턴과 관심 서적의 종류를 손쉽게 파악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도 사용자가 검색한 상품을 광고로 띄워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사용자의 클릭정보가 어디에 제공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개인의 세세한 정보까지도 디지털 감시의 기초 자료가 된다.

③ 개인의 정보감시, 아이폰

아이폰은 분실 시 위치추적과 폰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삭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데이터 삭제, 정보 유출 방지, 정보의 통제를 존재하는 영역 밖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통제의 기능은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스스로가 원격으로 감시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력관계는 현대 미디어를 가상적으로 소비하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다망감시 속의 구속

최근의 IoT 정보통신기술은 파놉티콘의 일망감시적 권력을 다망감시로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자의성(arbitrary)을 배제한 채, 매순간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하는 감시자가 되었다. 디지털 매체들은 사용자의 행위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의 의지를 배제한 채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 특성들은 TV, 신용카드, 교통카드, 내비게이션, 인터넷 서핑, 웨어러블디바이스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대의 일상인들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망감시 속에 구속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선(getz)의 가상적(virtual)인 존재성(presence)이 파놉티콘의 정보 소통의 관계였다면, 슈퍼 파놉티콘은 시선의 부재를 가상화(virtual)하여 정보를 소비하는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파놉티콘은 감시자의 감시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감시자의 존재는 내재화 된다. 그러나 슈퍼 파놉티콘은 시선의 존재 자체가 가상화되어 감시자나 감시자의 시선 자체가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과거의 감시는 타자로부터 구속된 것이지만, 현대의 감시는 일종의 동의를 전체로 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구성관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원하지 않는 정보의 노출이나 정보의 자의적 사용은 역시 슈퍼 파놉티콘이 가지는 권력인 것이다. 푸코는 파놉티콘에 대한 부정성만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파놉티콘이 그 당시의 시선의 권력과 그 권력을 만들어내는 구조로써의 에피스테메, 그리고 지식-권력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보학적 관점에 있다. 따라서 여전히 시선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단순히 시선의 권력 그 자체만을 논의의 중심에 놓기보다는 그 권력이 만들어지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푸코가 비판하고 경고했던 것이고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일 것이다. 권력관계의 내재화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그러한 권력이 가상의 환경과 사물, 다망의 구조 속에 놓여 있으니 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슈퍼 판옵티콘의 현상이 아닐까?

* 이 글은 필자의 기발표 논문 「다망감시로써의 슈퍼 파놉티콘을 통한 현대사회의 시선의 권력관계」(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009 Vol. 9 No. 10의 발췌·요약본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지면관계상 인용문에 대한 각주는 배제하였다.

주민등록제도와 총체적 감시사회

홍성태 _ 상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감시사회: 신체 감시와 자료 감시

모든 근대 사회는 '감시사회'이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1975)에서 제시했듯이 근대 권력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의 전면화와 내면화를 통해 권력의 안정을 추구했다. 근대화와 함께 국가의 감시는 훨씬 더 방대해지고 치밀해졌다. 모든 국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근대 국가의 성립과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사회학자 데이빗 라이언이 『전자 눈』(1994)에서 적절히 강조했듯이 근대 사회에서 감시는 통치만이 아니라 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요컨대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꾸리기 위해서도 근대 국가는 모든 국민을 감시해야 하며, 범죄에 대처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근대 국가는 모든 국민을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보자면 국가의 감시는 언제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감시를 둘러싼 국가와 국민의 이런 모순은 근대 사회의 핵심적 특징이다.

감시는 그 직접적인 대상으로 보았을 때 신체 감시와 자료 감시로 크게 나뉜다. 신체 감시는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를 감시하는 것이고, 자료 감시는 사람이 남긴 자료를 감시하는 것이다.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1936)〉라는 영화에서 '현대'를 원격 신체 감시의 시대로 묘사했다. 공장에서 사장이 텔레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 뒤 조지 오웰은 『1984(1948)』에서 스탈린의 독재를 염두에 두고 국가 권력이 텔레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국민에 대한 원격 신체 감시를 행하는 국가를 묘사했다. 이 유명한 영화와 소설이 잘 보여주듯이 신체 감시는 감시의 핵심이며,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이런 원격 신체 감시의 상황을 실현했다.

그러나 오늘날 더 널리 행해지며 더 깊은 정보를 취득하게 해 주는 것은 자료 감시이다. 우리는 매일 여러 물건들을 사고 사람들을 만나는 등의 많은 활동들을 하며 살아간다. 이 활동들은 모두 자료로 전환되어 축적되고 분석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료 감시이다. 정보화의 진척에 따라 이런 자료 감시는 더욱 더 널리 쉽게 행해지게 되었다. 오래 전에 김진균은 '스파이 체계'의 개념[1]으로 자료 감시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의 전척에 따라 '스파이 체계'가 전면화-일상화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그 귀결은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심판(1925)』에서 제시한 것처럼 불가시한 국가 권력의 강화와 개인의 파멸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감시의 문제는 근대화에 내재된 해방과 억압의 이중성을 드러내 보이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다.

독재를 위한 국가감시의 산물,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감시의 문제는 상존한다. 독재는 아예 국가의 감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국민들을 세뇌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국가의 감시를 최소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 정보화와 함께 이 과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먼저 국가의 감시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가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감시를 투명화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가를 국민이 잘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올바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은 국가의 감시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제도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권 이후 크게 악화되었다. 여기에는 박정희 독재에 의해 확립된 주민등록제도의 문제가 놓여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크게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표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를 주민등록표로 관리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6개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많은 개인정보를 숫자로 바꿔서 담고 있으며, 또한 사진과 지문이라는 극히 중요한 신체 정보가 담겨 있다. 주민등록증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무려 141개에 이른다. 이를 이용해서 정부는 국민의 신상을 상세히 감시할 수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고유번호제도, 즉 주민번호제도이다. 오늘날 모든 한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출생신고와 함께 국가로부터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며, 이 번호를 활용해서 거의 모든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심지어 죽어서도 이 번호로 관리된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를 초강력 국민감시제도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주민번호이다. 이 제도는 1968년의 '1·21 사태'를 계기로 주민등록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문날인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북한의 특공대에 놀란 박정희 독재는 모든 국민에게 출생과 함께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감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보화와 함께 주민번호의 위험은 더욱 더 커졌다. 예컨대 주민번호가 인터넷 이용의 기반이 되면서 주민번호의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의 불법수집과 불법활용의 문제가 개인정보보호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제도의 특이성과 위험성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주민등록은 본래 자치단체에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번호는 임의적으로 부여되며, 등록하는 개인정보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이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사실 '국민등록제도'이며, 국가가 영구적으로 부여한 주민번호로 대단히 많은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중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에서 가장 명확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지문날인 제도이다. 한국인은 누구나 만 17세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서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의 날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서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국민을 국가의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고 국가를 국민의 보호자로 간주하는 억압적 국가주의의 문제를 무엇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증 제도의 도입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강력하게 펼쳐졌다. 그러자 박정희 독재는 단독국회를 열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으로 주민등록증 제도와 열손가락 지문제도를 도입했다. 지문날인 제도는 대단히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시행령만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1999년의 10차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증 조항에 '지문'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 잘못의 시정을 회피하고 말았다. 재일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상태가 민주화에도 극복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던 것이다.

감시의 청산을 위하여

독재 정권이 사라지더라도 독재 정권이 만든 사회체계가 계속 유지되면 결국 독재는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독재 정권의 사회체계는 그 자체로 독재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독재적 주체를 계속 생산해서 결국 독재가 계속 지속되게 한다. 주민등록제도는 독재의 청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한국인의 모든 사회활동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혁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민주와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 범죄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모든 사찰은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활동이다. 그런데 박정희 독재의 주민등록제도는 사실 사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열손가락 지문과 생년월일을 적시한 주민등록증은 그 단적인 예이다. 불법사찰 범죄의 근간에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한 사찰의 당연시가 놓여 있다. 이 잘못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주민등록제도와 정보기술이 결합되면 사찰은 더욱 쉬워진다.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보기술체계는 바로 주민등록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보기술체계를 이용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독재의 청산이라는 점에서나, 정보위험사회의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이 과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 다행히 여러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1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4월에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이 공표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의 현실은 총체적인 인권 침해의 악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민주 독재화'의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경고했던 초강력 독재자인 '빅 브라더'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야말로 '빅 브라더'의 제도이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후진국'도 한국처럼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반민주적 감시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독재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고안된 주민등록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근대화의 본래적 위험과 정보화의 위험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은 다음 논문들을 참고
  - '주민등록제도와 총체적 감시사회: 박정희 독재의 구조적 유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9호/2006년 상반기
  - '주민등록제도와 일상적 감시사회: 박정희 체계를 넘어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2호/2007년 하반기
  - '유신 독재와 주민등록제도', 『역사비평』 100호/2012년 가을호

1) '테크놀로지적 사회구조론'(김진균, 1978)에서 제시된 개념.

함께 만드는 도시

건축가 하태석 인터뷰

본래 건축은 혼자 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건축계를 넘어 예술, 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축가가 있다. 설계사무실이 아니라 전시회장에서 음악, 영상 등을 이용한 인터렉티브 미디어 작업을 통해 건축과 도시를 구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작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따뜻한 봄날, 햇살이 가득한 옥상 정원에서 건축가 하태석이 꿈꾸는 '함께 만드는 도시'의 모습에 관해 물었다.

인터뷰 및 편집 **채다희, 황민아**

하태석 _ 건축가, 미디어아티스트, SCALe 대표, 젊은건축가포럼코리아 위원장

서강대학원신문(이하 서강). **건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비전문가로서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하면 미술이나 영상 등은 떠오르지만 건축은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건축가이며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두 분야를 어떻게 아우르며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해달라.**

하태석(이하 하). 아시는 대로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사람이다. 하지만 건축은 도시 안에서 건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가의 아이디어는 그림, 드로잉, 모형 등으로만 남기도 하고 전시를 통해 공개되기도 한다.

2010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전시를 할 때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누군가에 의해 탑-다운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건축물로 구현하면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우리가 도시를 점유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좋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반대로 바텀-업 방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도시를 만든다면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거나 모형으로 만드는 대신 실제로 스마트폰 어플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입력하면 집이 나오고, 그것이 화면 안의 도시에 바로 반영되어 업데이트되도록 만들었다. 즉, 도면이나 그림이 아니라 관객이 참여하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이다. 어플과 디지털 프로젝션 미디어 룸, 변화하는 영상과 음악을 이용해 전시를 했는데, 이것을 예술계에서는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라고 칭했다. 그 이후로 미디어 아트 전시회에 초대를 받으면서 미디어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서강. 작품을 하면서 도시 계획이나 건축뿐만 아니라 음악을 활용한 점이 재미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이 입력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도시가 구현되고 영상과 음악도 변한다면 고정된 전시가 아니라 관객에 따라 변화하는 전시가 될 것 같다.

하. 그렇다.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인터렉티브한 미디어 영상을 만든 것이다. 그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당시 의뢰를 받아서 미디어 작업을 하기도 했다.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의뢰를 받은 케이스인데, 그때 했던 작업도 예술적 형식으로 표현했지만 내용은 건축이다.

서강. 보통 건축이나 도시를 생각하면 누군가 설계를 하고, 여러 사람이 지은 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터렉티브한 작업이 실제 생활에 적용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하) 인터렉티브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지어진 대상과 대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을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물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 사무실도 가운데가 육각형인데, 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것을 어플로 조정하는데 여섯 면이 다 올라가면 큰 회의실이 되고, 다시 벽을 내리면 집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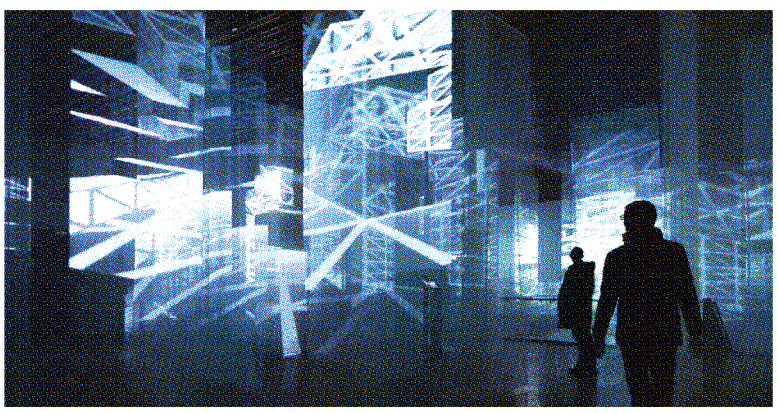
서강. '젊은 건축가 포럼 코리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젊은 건축가'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 혹은 젊은 건축가로서 '기성 건축가'와 달리 추구하는 점은 무엇인가?

하. 보통 '젊은 건축가'는 주로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건축가를 말한다. '젊다'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는 20대 혹은 30대 초반까지이지만, 건축가로서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 마흔 전후가 되어야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50-60년대생 선배들은 우리나라 개발 붐 등을 겪은 세대이기에 혜택과 기회가 많았다. 젊었을 때 사무실을 차려서 30대 초반에 설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건축가들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미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작은 집을 짓지도 않아서 큰 설계 사무소만 살아남는 시대에 건축계에 뛰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조그만 집들을 짓기도 하면서 젊은 건축가들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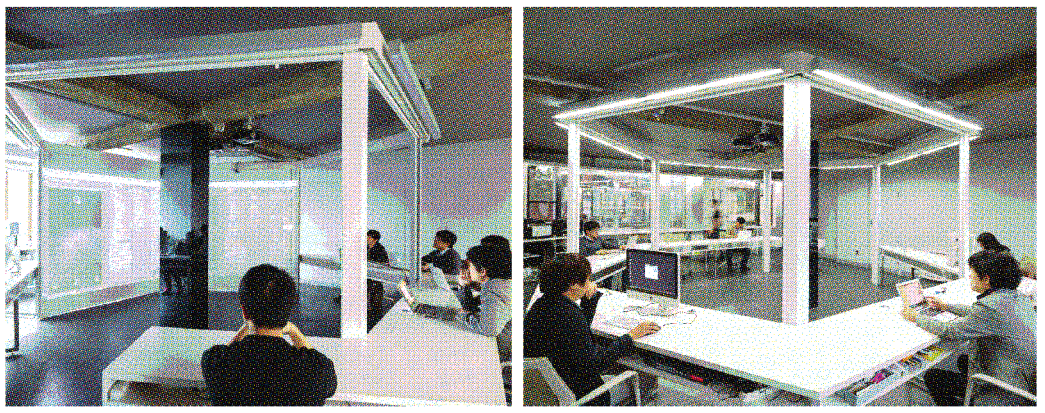
또한 기성 건축가들이 논했던 건축 담론들은 거시적이고 크다. 그들이 모더니즘, 한국 사회, 건축의 본질처럼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것을 강조했다면 최근 젊은 건축가들은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 스펙타클하고 철학적 깊이가 있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동네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지,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등과 관련한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실제로 그런 의뢰가 제법 들어오기도 하고 본인들도 그런 일을 즐겨 한다. 젊은 건축가들이 건축에 접근하는 방식도 기성 건축가와 다르고, 개개인의 스타일이나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다.

서강. 기성 건축가들은 국가가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범위의 도시를 지어야만 했다면, 최근 젊은 건축가들은 이미 세워진 도시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건물을 구현하느냐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하. 그렇다. 얼마 전에 〈어반 메니페스토〉라는 전시를 하면서 젊은 건축가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일상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최근 젊은 건축가들이 건축 외적인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



〈떠도는 기하: 콜렉티브뮤지움〉 사진 제공_ SCALe
2013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3월 1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던 프로덕션 SCALe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작품. 완성된 건축은 형태를 위한 결정들이 축적되면서 드러나는데 〈떠도는 기하: 콜렉티브뮤지움〉은 이 결정들에 사용자를 참여시켜 건축적 결과물들을 공유한다. (편집자주)



〈사무실〉 사진 제공_ SCALe
건축사무소 SCALe의 내부 모습. 어플을 통해 제어되는 사무실 벽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무실 내부 벽이 모두 제거되면 육각형 모양의 회의실 공간이 만들어진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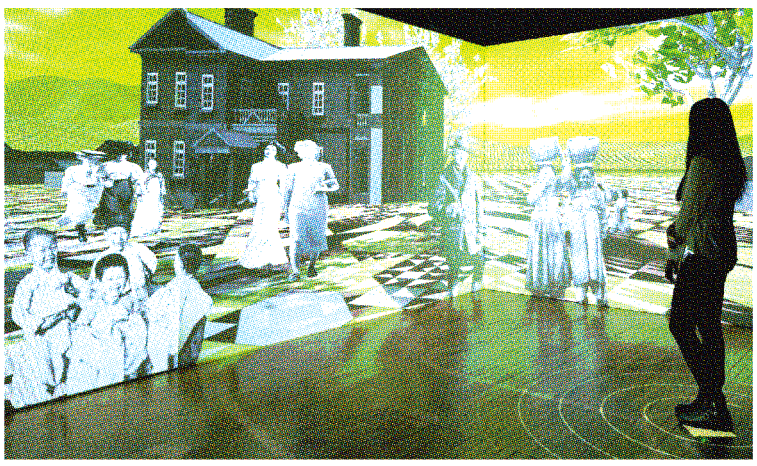
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건축은 '건물을 짓는 거야'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건물 안에 둘 가구도 디자인하기도 하고 제품이나 미디어를 디자인하기도 한다. 사실 디자인의 프로페션의 원조가 건축가이다. 공간, 건물이 큰 디자인이고 그것이 모인 도시가 가장 큰 디자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서강. 아카이브와 포럼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건축물 전시나 역사를 구현하는 형식의 전시 등 건축을 새롭게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보통 건축가라고 하면 설계 현장에 있거나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건축가님께서 전시회 현장 등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이유나 그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소개해달라.

하. 그동안 건축가들이 자기 영역 안에서만 갇혀 다른 크리에이터들, 예술가, 디자이너들과의 소통이 없었다. 이것은 건축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된다.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와 연결하는 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07년부터인가 이러한 기획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이런 기획자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훌륭한 기획자들이 많이 생겼다. 여러 분야가 함께 소통하며 자극을 주고받고, 콜라보레이션도 해서 더 좋은 작업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기획들을 주로 했다. '젊은 건축가 포럼 코리아'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3년 전에 '젊은 건축가 포럼 코리아'을 결성할 때만 해도 사회적으로 젊은 건축가들의 역할이 미미했지만 우리 사회에 훌륭하고 젊은 건축가들이 많고, 그들의 작업을 같이 공유하고 알리자하는 취지로 컨퍼런스 파티 등을 시작했다. 형식에 구애받기보다는 기획의도가 여러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시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토크나 파티 등 여러 방식으로 표출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서강. 미디어 아트 〈시간여행: 정동 1900(이하 '시간여행')〉의 경우 외국인 선교사의 구한말 생활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미디어 아트 작업은 매우 생소한 작업일 것 같다. 시간적인 것을 공간에 푸는 작업, 역사적인 내용을 공간에 옮기는 작업이 어려운 작업일 것 같다. 이 작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하. 건축가나 작가로서 제 작품을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시 디자인을 의뢰 받아서 한 것은 '시간여행'이 처음이었다. 건축가는 공간을 다루는 사람인데, 뉴미디어에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있다.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시간적으로 풀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공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시간여행'을 작업했다. 백 년 전의 공간을 컨셉슈얼하게 구현하여 사람들이 도시를 거닐면 그에 따라 공간이 반응하고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였다. 바닥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 위에서 다른 위치에 갈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화면을 보여준다. 내가 서 있는 위치의 100년 전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



〈시간여행: 정동 1900〉 사진 제공_ SCALe
〈시간여행: 정동1900〉은 1890년~1910년 당시 정동의 모습을 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의 시각으로 재현한다. 전시장내의 축소된 정동을 거닐면 당시의 거리 모습이 전면에 펼쳐진다. (편집자주)

서강. 위 전시가 일반적인 건축물 전시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 보통 건축 전시는 도면, 렌더링, CG, 컨셉을 설명한 다이어그램, 모형 등을 전시한다. 건축은 삼차원이고 크기 때문에 복잡하다.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가뜩이나 복잡한 것을 도면 등으로 전시하니 더욱 복잡해진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도면을 읽을 수 있으니까 도면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전문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만드는 데, 아시다시피 모형은 작다. 3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로 축소하고 위에서 모형을 바라보게 만든다. 하지만 건축은 공간감이 중요하다. 공간 안에 있어야 건축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지 위에서 본다고 해서 그 건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상을 돕기 위해 그 공간에 들어 있는 것처럼 CG로 투시도를 그린다. 하지만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데, 분절되어있고 투시도간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이 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악보만 전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건축가들은 평면을 보면 공간을 이해하지만, 건축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관객이 컨셉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기 위해서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는 것이다.

서강. 그렇다면 건축물 전시는 비전문가에게 공개가 안 되는가?

하. 공개는 되는데 이해와 소통이 잘 안되니까 비전문가들의 호응이 별로 없다. 건축가들만 모여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서강.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 전시가 대표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와 협업을 하신 작업인 것 같다. '사랑당: 푸른 빛의 전설' 작업을 통해 이 전시에 참여한 것인가?

하. 그렇다. 제가 총 감독을 맡았고, 전시 중에 '사랑당: 푸른 빛의 전설'에 작가로도 참여했다. 이 전시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끼리 협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취지였다. 그래서 각각의 팀에 건축가, 예술가, 과학자가 한 명씩 포함되어 팀을 이루었다. 재미있었다. 저희 팀에는 해양 바이오 과학자가 계셨는데, 그 분이 연구하시는 발광성질을 가진 미세조류를 건축 작업에 도입을 했다. 밤에 흔들면 빛을 발하는 생물 발광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지역의 풍습을 담은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서강. 마을의 전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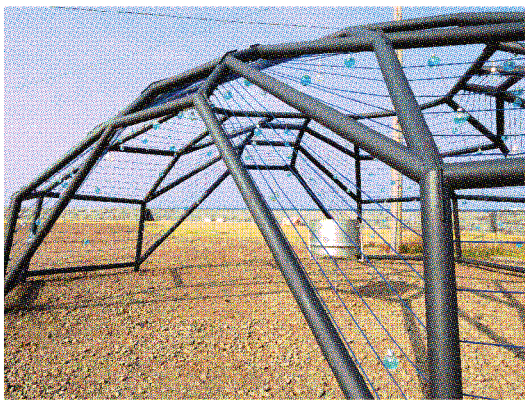
하. 사실 이 전설은 제가 쓴 것이다. (웃음) 이 작업이 재미있었던 것이 팀원들과 '전설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전설을 만들고 그것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든 것이다. 아마 마을 사람들이 '어? 우리 마을에 이런 전설이 있어?' 라고 했을 것이다. 당이라는 것은 제주도 민속 신앙인데, 작은 돌담을 쌓고 바다 앞에서 구복을 한다. 하나의 당에는 하나의 구복을 한다고 하더라. 이 당에서는 아이를 낳게 해주는 구복만 할 수 있고 저 당에서는 피부병을 고쳐주는 당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당을 만들자'고 해서 '사랑당'을 만들게 되었다.

서강. 건축 작업은 협동 작업이다. 건축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과들과 협업을 많이 하시는데 진정한 의미의 협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 건축은 전통적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예술가는 생각하는 사람, 그리는 사람, 물감 사는 사람이 다 같은데 건축 분야에서는 생각하는 사람(건축가), 벽돌 사는 사람(건축주), 짓는 사람(시공자)이 다 다르다. 건축가가 전체적으로 컨셉이나 공간을 생각을 하면 구조는 구조 기술사가, 전기 설비는 전기 설비 회사가 하고 기계 설비는 기계 설계회사가 하고 조경 디자인은 조경 설계사가 하고 심지어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는 구도이다. 건축은 다른 분야보다 더 협업을 하기 때문에 협업을 잘하는 직종일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은 단순히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협업의 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협업을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영역이 만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 공간 안에 있더라도 하나의 공간으로 융합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협업이 아니다. 따라서 초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협업을 할 때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난다고 생각한다.

서강. 협동 작업을 할 때 의견 충돌이나 윤리적인 문제 등을 마주하는 일이 많을 것 같다. 어떤 분야에서건 협업을 할 때 가져야 할 소양과 자세를 조언해 달라.

하. 협동 작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상대방과 상대방의 분야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가가 말하는 '커뮤니티'와 사회학자가 말하는 그 뜻은 다르다. 같은 단어라도 분야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분야간에 협동,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 제가 음악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분들의 깊이만큼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 것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 가장 좋고, 한 사람이라도 이해해서 함께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말만 하다가 부딪히게 될 것이다. 또한 협업을 할 때에는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역할이 중복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역할, 규칙 등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를 해야 한다.



〈사랑당: 푸른빛의 전설〉 사진 제공_ SCALe
2013년 건축가, 예술가, 과학자가 팀을 이루고 협업을 통해 자연과 미디어를 주제로 하는 공공예술 작품을 제주도 마을에 설치하고 공유하는 융복합 공공예술 프로젝트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에서 하태석, 권병준, 김대희가 제작한 지속가능한 조명장치. 바람이 불면 사랑당 건축물에 달린 캡슐을 흔들리고, 그 안의 미세조류들이 빛을 발한다. (편집자주)

서강. 건축가로서 도시의 미래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다. 개인적으로 꿈꾸는 미래의 도시나 건축은 어떠한 것인가?

하. 저는 사람, 사용자, 거주자가 주체가 되는 건축 혹은 도시를 꿈꾼다. 건축이나 도시가 먼저가 되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려면 건축이 적응가능성, 유연성, 상호작용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만의 자동차를 갖는 것이 상류층의 전유물인 것처럼 건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본인에게 맞춤화된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축이면 좋겠다. 사람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고 거주자가 중심이 되는 건축,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가 제가 꿈꾸는 건축과 도시이다.

서강.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하. 건축은 우리한테 사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하루의 90% 정도를 건축 안에서 살고 있고 알게 모르게 건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건축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처칠은 "사람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다시 건축에 의해서 형성된다. 학교 건물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짓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성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수업시간에 덜 졸수도 있다. 업무시설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주거와 건축을 디자인해야 한다. 저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데에는 주거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마저 답답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양재동에서 7년 정도 일하다가 이태원으로 사무실로 옮겼다. 양재동에서 일할 때는 외부에 비가 오는지 해가 떴는지 몰랐다. 그런데 사무실을 옮긴 이후 해가 지는 것도 보고 석양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해가 좋을 때는 옥상에 올라와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 그것이 굉장히 즐겁다. 그게 건축의 힘이다. 누구나 건축물 안에 사는 만큼 거주자가 스스로 "우리 집은 왜 더 좋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건축가와 공유하면 더 좋고 행복한 공간에서 살 수 있다. 사람들은 건축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사는 바로 여기가 건축이다. 계속해서 보다 나은 공간을 꿈꾸면 언젠가는 자신이 그 공간에 있을 것이다.

학내 사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육과 연구에 대한 긴 안목없이 추진되는 남양주 제 2 캠퍼스와 박사 학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홍성렬 회장의 명예 박사 학위 수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학문의 가치', '교육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금 이 곳에서, 본교의 학생대표자로 학교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 온 서강대학교, 서강대학원 총학생회를 만나 '대화'를 나눠 보았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원 총학생회〉 라운드 테이블

진행 박경룡 서강대학원신문 편집위원
토론 김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 28대 총학생회장
김민건 서강대학교 45대 총학생회장
이하나 서강대학교 45대 부총학생회장
기록 황민아 서강대학원신문 수습 편집위원

총학생회 활동의 어려움, 소신과 중립 사이에서

신문사〉 서강대학교(원)에서 학생 자치 기구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해봤으면 합니다. 학생 대표로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하나〉 (총학생회 활동의) 어려움들을 항상 느껴요.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의견을 내야한다는 고민들이죠. 그 의견이 전체 학우들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총학생회에 들어오는 요청들을 개인적으로는 내리고 싶은 결정이 있지만,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결단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지가 늘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민건〉 같은 연장선에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서 학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전체를 총괄하는 의장이 되다보니까 개인의 생각과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견들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집행부 내부에 있어서도 사소한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어감, 어조 갖고 국장들끼리 얘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욕은 먹기 싫고 둥글둥글하게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생각한 바와 다르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적 갈등들을 느껴요. 그래도 제 바람은 기본적으로는 학내 사안에 힘쓰면서 마땅히 지성인으로서 낼 수 있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갖는 합리적인 총학생회가 되고 싶어요.

김진석〉 대학원 총학생회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자치 단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국가 조직의 축소판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말 하나도 조심해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견을 전체 의견으로 표명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죠. 특히나 대학원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 학생회처럼 정기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단대 학생회장들이나 과 대표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모이게 만들기 힘들고 학생회 임원들끼리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사안들을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지난 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학부 학생회랑 이야기를 해서 시국선언을 같이 하자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총학생회가 대학원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결국 못했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단체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죠.

총학생회와 학교 본부를 잇는 열쇠,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신문사〉 학생과 학교의 중간에 있으면 대학 본부를 직접 만날 일이 많아 보이는데, 대학 본부를 만나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김민건

김민건〉 제가 받은 느낌은 대학 본부의 문이 분명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걸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뛰고 있는 중이에요. 대학 본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선은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와요. 대표적인 문제가 재정상의 문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과거 공학부 학생회장을 하면서부터 느꼈던 것이 이 열쇠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뛰면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번 축제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한 그림을 만들려면 대운동장을 열어야 했어요. 근데 안 된대요. 여태껏 인조 잔디 깔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안 된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설사 잔디가 조금 눌리더라도 나중에 피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쇠를 찾으려고 뛰어다녔어요. 총장님도 찾아가고, 학생문화 처장님한테도 찾아가고, 학생지원팀에도 부탁하고, 여기저기 말씀드리니까 되더라고요.

교육, 복지 같은 다른 안건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먼저 돌아오는 말은 '안 돼.', '재정이 안 돼.', '절차가 안 돼.'예요. 근데 그 열쇠를 찾으면 되더라고요. 부딪혀 보면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진석〉 저희도 이나시오 성당 강당이랑 다산관 1층에 있는 강당조차도 교수님을 동반한 과행사가 아니면 안 빌려 준다고 해서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기획 특강을 못할 뻔 했었어요. 계속 안 빌려준다는 거를 직접 얘기하고 부딪히면서 결국은 했어요. 저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학교 측이 되게 닫혀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학교에서도 학교가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결국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죠.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보다 우선은 설득과 이해를 위해 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김민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학교 관계부처들과의 다리를 많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몇몇 학생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를 나쁜 존재로 보고 학교와는 투쟁을 하고 부딪쳐야 한다는 생각들이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둥글둥글한 학생회를 지향하다보니까,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어떤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다리를 만드는 방법을 많이 취해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총장님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갔더니 표정이 딱 바뀌세요. 저 혼자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총장님도 조금 편하게 대하지 못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서실에서도 꺼려하고 약속을 안 잡아주시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불쑥불쑥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다니면서 다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앞으로 남은 임기 6개월이 지나고 다음 총학생회에서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다음 총학생회에서 봤을 때 효과가 떨어졌다는 판단이 들면 다시 투쟁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제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공약이나 학교와의 대화와의 과정에서 얼마나 이루어 내었는가를 평가한 후에 나올 것 같아요.

신문사〉 지난 5월, '전체학생총회(이하 '전학총')가 4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내 이슈나 학생회 활동에 무관심하고 참여 의지가 약하다고 대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민건〉 2011년에도 (전학총이) 한번 성사가 됐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2, 30년 만에 성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이 아마 2번째로 성사된 걸 거예요. 우선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요즘 대학생들 본인들의 스펙 쌓고 취업 준비하기에 바쁘지 누가 뜻을 갖고 학내 이슈에 의견을 표명하고 그러겠어요. 저도 사실은 당선되고 나서 신입생들을 많이 봤는데 모르는 건 둘째 치고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반드시 이것을 성사시켜서 학교에 '이게 우리 전체 총회에서 나온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학교에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응원제전, 해오름제, 단대별 축제, 서강 문화제까지 다 따로 있고, 그러다보니 2학기의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이 행사예요. 너무 난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하나로 몰아서 성공시켜 보자고 해서 전학총회와 합친 거죠. 결과적으로 천 명 정도 모여 성사를 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었어요. '전학총'의 본질이 학생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인데 다른 행사랑 섞이면서 그런 부분이 약화됐다는 느낌이 든 거죠.

이하나〉 저는 전학총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저희 학교 장점이 소수정예잖아요. 직접 민주주의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그런 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중앙운영위에서 학내 사안을 대표들한테 받아서 직접 서강 학우들에게 의견을 묻고 투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다만 공간상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사안들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해요.

신문사〉 (대학원 총학생회장님께) 학부와 같이 대학원에서도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현재는 대학원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지 말씀 해주세요.

김진석

김진석〉 일단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원우들께서도 느끼시피 개개인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투자하기를 바라지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학내의 이슈를 논의하자는 건 지나친 기대인 거 같아요. 분명 이러한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자주 연락하는 거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세요. 직접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하려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과 전체 차원에서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원우들은 아닐 수 있다고 설득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렇게 원우 분들을 계속 만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원은 학부와 경우가 다른 거 같아요. 학부 같은 경우는 4년이지만 대학원은 코스웍 안에 빨리 끝내고 나가려고 하고 박사분들은 더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추억쌓기 같은 시간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같더라

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기획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필요한 게 아니면 잘 안 오죠. 저희도 학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원우들이 필요한 게 뭔지 잘 파악해서 참여하게끔 노력하는데 사정이 다른 거 같아요.

신문사〉 8, 90년대의 정치적이고 투쟁적이었던 학생회에서 비정치적, 반운동권적인 총학생회의 모습이 최근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 총학생회의 경우도 그런 갈림길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지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민건〉 우선 기자 분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비(운동)권이에요?, 운동권이에요?, 반(운동)권이에요?, 아니면 전대 학생회 이어 받았어요?, 연관 있어요?' 예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제일 싫어해요. 굳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비(운동)권'인 게 맞아요. '비(운동)권'이긴 한데, 저는 '비(운동)권', '운동권', '반(운동)권'을 구분 짓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회라는 존재가 학생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잘 대변하고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어떤 성향인 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과거 비(운동)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학생회를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부총학생회장님은 주거권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면서 기숙사 문제, 특별히 이번에 고려대 기숙사 문제도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굳이 정치적인 학생회를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치적이려고 해요. 모호한 말이기는 한데 중간의 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게 어떤 당의 이념을 갖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관심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로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제 자신의 신념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려는 측면에서 그 결과가 정치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문사〉 본교 '등록금 심의 위원회(이하 '등심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나눴으면 합니다. 실제 '등심위'를 참여하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김진석〉 전 '등심위'를 두 번 들어간 경우에요.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혼자 고군분투한 느낌이었어요. '등심위'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고 알아보기도 힘든 회계 정보를 보고 설명을 하시는 데 적절히 반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건 공식적으로 '등심위'를 개최했지만 정말 뻔해 보이는 자리 같았다는 것이었어요. 맞춰진 대로 진행되는 '보여주기식' 행사 같았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리 학부 총학생회장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전원협(전국대학원총학생협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학교가 만들어 놓은 판에서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김민건〉 사실 '등심위'를 처음 참여하면서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기도 해서,) 꼼꼼히 살펴 볼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무기력하더라고요. 정보력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요, 그러니깐 우리 말을 따라야 되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 찬성을 못하겠고 반박을 해야 하는데 막상 반박을 하자니 (등심위) 기간도 부족했고 힘의 균형도 맞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계절학기 인하는 소폭이지만 인하를 시켰어요. 몇 년 동안 동결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가 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의 적립금은 점점 떨어져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은 계속 또 있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돈이 많이 필요해'라고 제시할 근거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잘 볼 줄 안다면 잘못됐다는 걸 조목조목 반박을 할 건데, 그렇지 못하니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하나〉 전 '등심위'에 참여 하진 않았지만 외부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상 등심위에 학교 측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영학과 교수님들, (전문적으로) 회계를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리 학생들이 몇 달 밤새워 본다고 해도 그분들이 짜놓은 거에 빈틈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우리는 민주적으로 (등심위를) 했어.'라고 말을 하기 위한 의례라고 생각해요.

지난 등록금 심의 위원회, 핵심 쟁점들

신문사〉 지난 '등심위'에서 실질적으로 쟁점 사항이 됐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김진석〉 가장 쟁점이 됐던 거는 학교 재정 악화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는 동결이고 대학원은 인상을 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받는 비용들 중에서 장학금은 깎이지 않았지만 학과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전체 돌아가는 비용들의 2, 30% 삭감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인상 된다면 그에 합당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에 대한 요구를 계속 했어요. 예산 삭감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내는 등록금에 비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올릴 건지 학교 측에 물어봤는데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이 됐던 거는, 남양주 캠퍼스의 경우는 조금 장기적인 이야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교내에서 계속해서 지어지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들 중에서 등록금 중 일부가 쓰여서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는가?'였어요. '그럴 경우, 건축을 천천히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기부금을 더 꾸준히 모아서 적립금으로 진행한다든지 해야지 학생들 등록금 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공감을 하죠. 학교 기획팀 담당자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 임용된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잘못은 아니다. 이전부터 운영을 잘해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여태 그것이 이어져 여기까지 왔다.'라고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정적인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학부는 올리지 말라고 정부에서 압박을 주니까 대학원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줘야지 학교 재정의 숨통이 트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민건〉 저희도 같은 쟁점이었어요. 큰 틀에서 보자면 이번 등심위에서 학교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지를 어필하는 자리였고 우리는 '학교 본부에서 이런 것도 안 해주는데 왜 무조건 동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등록금) 낮춰주세요.'하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J관, R관, 베르크만스 우정원, 남도 경제관까지 신축 대형 건물들이 몇 개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J관, R관 빚낸 것도 다 못 갚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십 몇 억씩 갚아야 해요. 근데 과연 건축 비용에 등록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설사 건축 비용에 등록금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건물을 운영하는 비용에 등록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금, 내부 인테리어, 용역비 다 등록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고려해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고려하지 않고 운영한 거니까 잘못된 건데 그걸 왜 학생들한테 전가하냐고 따졌죠. 그렇게 물으면 인정해요. 근데 어쩔 수 없대요. 왜냐하면 백억씩 적립금이 깎이고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게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김진석〉 학교가 했던 말로 이야기 하자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등록금 수준을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정도의 등록금이 필요하다. 이해해 달라. 적립금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김민건〉 학부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저는 계절 학기를 많이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동안 등심위에서는 계절 학기를 심도 있게 다룬 적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공약에도 계절 학기 수업료를 낮추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나름대로 대학 알림이 보면서 가공해서 표 만들고 다른 학교 꺼 조사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비싸다. 근데 왜 비싼지 모르겠다.'라고 제시 했어요. 사실 그거 인하 해봤자 몇 천만원 밖에 안 될 거에요. 근데 학교에서 그것도 아깝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고 하니깐 기획처장님이 기획 예산팀 쪽에 그냥 해줘라 하신 거예요. 기획 예산팀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처장님이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 해온 거니까 해줘.'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들었어요.

신문사〉 합리적인 등록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등록금 결정 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이하나

이하나〉 등록금에 대해 관심은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는 등록금, 생활비를 벌려고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대학 공부를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아서 대학에서 그런 거(등록금 부담)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하는 경쟁이 치열한 지금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대신 등록금을 올리든 말든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재정 투명화를 해라.'고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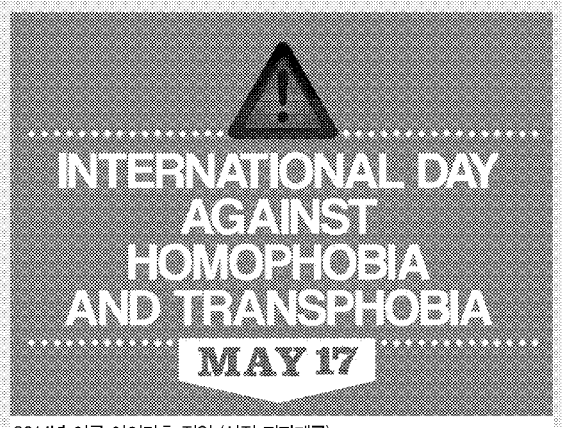
김민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열에 여덟은 무관심하고 한 두명 정도가 관심을 갖고 의견 표명을 하고 저희와 같이 직접 활동을 하고 그래요. 등록금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깐 학우들이 '등심위'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못하는 거 같아요. 왜 인하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학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님이 등록금을 많이 내주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알았지, 그전처럼 부모님이 내주시는 대로 그냥 지냈다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일반 학우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다 알겠어요?

신문사〉 마지막으로 대학생, 대학원생으로서의 자신을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 지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하나〉 저는 대학에 와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대학에 왔을 때는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보면 대학이 아니라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학년 때는 학점 관리를 하고 대외 활동을 하고 인턴을 하고 제 2외국어를 해서 취직하는 것이 정석인거고 엘리트인거고 생각이 있는 거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철이 없고 틀리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죠.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순수한 기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를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스펙 쌓기로 생각한다는 게 아쉬운 거죠.

김민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흐름이, 시대상이, 이렇게 만든 거 같아요. 요즘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취업 전문학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제법 많아요. 저도 계속 대표를 하면서 매년 신입생들을 만나보면 만날 때마다 애들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개인주의가 좀 강해지고, 그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본인 공부, 본인 학점, 본인 스펙, 본인 취업에 목숨을 거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하고 싶은 대학생활을 했거든요. 4년 동안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게 좋아가지고 하고 싶은걸 해서 후배들한테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거든요. 학생회 회장이나 뭐를 하고 싶은 애들이 항상 저한테 와요. '저는 이런 학생회 활동하고 싶은데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요?'라고 많이 질문해요. 곧 있으면 11월 선거철이 될 건데, 그때 되면 애들이 또 찾아 올 거예요. 저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거든요.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고 물론 학점은 잘 못챙겼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김진석〉 맨 처음에 대학 들어왔을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다 해결 되겠지.'라고 생각 했었는데 넘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도전해서 깨부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저는 취업을 한번 하고 대학원에 들어 온 입장이거든요. 회사를 한 번 들어가 보니까 회사에 들어간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회사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해도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대단한 연구자가 되겠다 싶어서 들어온 거는 아니었어요. 학부도 스펙을 위해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대학원이 개인주의의 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거 보면 아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렇게 바쁜 걸 까? 바쁘게 살아가면서 과연 이 안에서 뭘 배워 가는 걸까. 조금 회의감도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안에서도 공부 외적으로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경험이나 조금씩 만나는 인연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2014년 여름 아이다호 전언 (사진_저자제공)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

이종걸 _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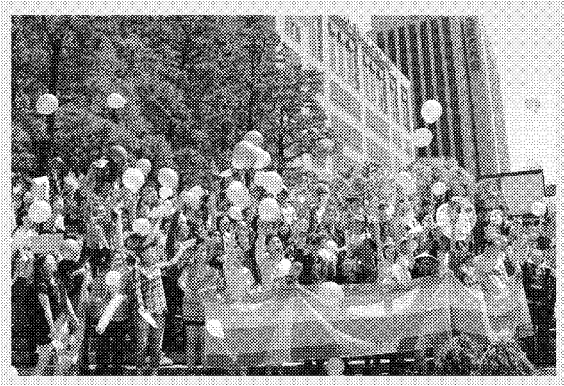
아이다호(IDAHO)의 의미와 목적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란 영문명에서 머리글자를 따서 'IDAHO(아이다호)' 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이 연출하고 세상을 떠난 배우 리버 피닉스가 출연한 영화 〈아이다호(My own Private Idaho)〉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퀴어 영화로도 사랑받은 영화〈아이다호〉를 떠올리며 이 날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2004년부터 'IDAHO' 를 논의해온 아이다호 위원회(http://dayagainsthomophobia.org/)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인 1990년 5월 17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날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억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주요 정책입안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알려 공론화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행동하는 날입니다. 매년 5월 17일만큼은 가족, 직장, 학교 등에서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 그리고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인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현실에 맞게 주도적이면서 집단적인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130여 개국, 1280여 개 단체의 1600개의 관련 행사가 5월 17날 동시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의 양상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보수 기독교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세력들은 집단적으로 혐오와 차별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결국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요 활동을 보면 동성애만을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닌 인권문제와 차별금지라는 논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아이다호 레인보우 액션 (사진_저자제공)

2007년 10월 31일 참여정부시절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며 강하게 추진하려던 차별금지법안 중 성적 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등이 포함된 원안에서 이 7가지 항목을 삭제하고 국무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보수기독교 단체,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의 강력한 반대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2001년에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사유임에도 말입니다. 그 이후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이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축소시켜놓고 이 법안들이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이후 국회를 통해 입법 발의된 제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재계는 멀찌감치 팔짱을 끼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남성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계간이라는 혐오적인 언어로 차별하고, 형벌로 처벌하며, 성폭력이라고 할 수 없는 개인 가장 내밀한 영역인 성적 접촉까지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보수 기독교계들은 이 법안이 없으면 군대에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하여 기독교인들을 호도하였으며 국가인권위가 위헌 결정을 내야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자 국가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를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기관인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에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거나 차별하는 법조항 폐지 운동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보수 기독계는 성적 지향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 부분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과 올해 3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복귀할 수 있다고 단정하며 동성애 전환치료를 위한 〈탈동성애인권포럼〉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동성애자들은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죄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일방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무시하며,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보수기독교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교육지침을 각 교육청에 하달하면서 성교육 중에 '동성애'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혐오와 맞서 싸우기 위한 노력

한국에서 진행한 동성애 혐오 반대를 위한 첫 번째 행동은 2007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의 동성애 비정상 발언에 대한 규탄 사이버 시위였습니다. 그 후 2009년에는 시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캠페인, 게이 프리허그, 게이 코러스의 공연, 커밍아웃 캠페인, 플래시몹 등 가시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다호를 알리고 기사화하였으며 SNS와 해외 뉴스를 통해 한국에서의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양상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지를 알리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지난 12월 서울시청을 점거한 무지개 농성장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혐오세력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서울시가 정작 시민인권헌장을 폐기한다고 하자 그에 비롯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농성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자들이 함께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함께 모여 권리와 변화와 사랑을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열린 5월 16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그 농성에 함께 한 힘들이 다시 결의하는 마음으로 모여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맞서 싸울 것인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천여 명이 서울역광장에 모인 지난 5월 17일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단지 성소수자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이며 노동, 여성, 빈곤, 평화, 이주, 장애 등 다양한 인권의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서로의 힘을 모아 연대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투쟁해야하다는 결의를 맺었습니다. 그 결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으며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들에게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또한 연대의 힘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5월 16일 서울역광장에는 전국의 무지개가 함께 모였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전주, 대구에서 혐오와 맞서 싸우기 위해 희망을 담은 무지개버스들이 서울역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가 우리 사회의 희망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양성과 인권의 광장이 열리는 순간에 모인 무지개들이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희망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이 후퇴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더 이상은 혐오가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내년 아이다호 때 다시 만나 인간의 존엄을 위해 각각의 현장에서 함께 싸운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어라"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문화제 (사진_저자제공)

미국의 히스패닉과 백인의 집단간, 세대별 이념성향 분석

김성모 _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인구 증가와 정치적 영향력의 상관관계

'히스패닉과 백인의 집단간, 세대별 이념성향 분석'은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지 데이터를 통해 통계로 분석한 논문의 주제이다. 히스패닉과 백인을 주제로 글을 쓰게 된 배경은 미국정치 수업을 들으며 미국 내 히스패닉의 영향력이 인구수의 비약적인 증가에 결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 내 거주중인 한국인도 인구수만 증가되면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을까?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경우 인구수는 매우 작지만 그 영향력은 미국 내 지배적인 것을 반례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주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하버드에서 조사한 2010-2012년의 히스패닉과 백인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히스패닉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연구 가설은 '백인이라는 주류집단에 대해 히스패닉은 비 주류집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미국 내 특정 정치이슈에 대한 히스패닉이 나타내는 이념성향을 집단별, 세대별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은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세력인데 반해 백인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 특정 정치이슈에 대해 히스패닉 중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대 집단 또는 특정집단이 존재한다면 이들과 백인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내는 것이 한 예일 수 있을 것이다. 지면 관계상 이하의 내용은 서유강론에서 논하는 것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논문에 도움이 되는 팁!

대학원에서 2년 6개월을 공부하며 참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논문이나 기말 페이퍼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몇 가지 남겨본다면, 첫 번째로 대외적인 활동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는 각 전공별 국내 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국내 학회의 경우는 학회에 연락하여 대학원 패널을 신청하게 되면 학회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나눌 수 있고 그만큼 학문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인은 다행히 좋은 기회를 얻어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 국제정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는 한국정치학회에서 열린 국내학술회의에서도 발표하며 많은 배움을 얻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교수님과의 소통이다. 현재 학위 논문을 쓰면서 1주일에 두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 예전에 그렇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논문을 쓸 때 많이 찾아뵙고 상담할수록 논문의 성과는 물론 식견 또한 비약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자주 찾아뵙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주제 선정과 진행에 관한 것이다. 주제 선정에 대하여 지도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주제를 선정하지 못하는 것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다. 논문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참 당연한 말씀인 것 같다. 결국 주제 탐색은 선행연구 속에 답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신 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원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 하겠다.

백제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명문의 재검토

이천우 _ 사학과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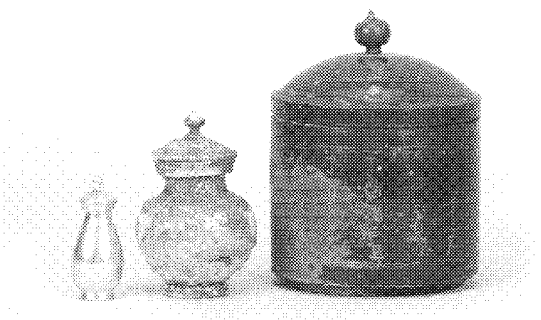
학문 간의 소통 필요

본 논문은 2014년 2학기 대학원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었다. '사학'이라 한다면 넓게는 '역사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헌학, 고고학, 미술사학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역시 사학, 특히 한국 고대사를 전공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헌학'에 편중되어 공부를 해왔었다. 때문에 고고학과 미술 사학 등 인접 학문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나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 사학계 내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소수의 연계 연구가 시도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각의 분야, 즉 문헌학은 문헌학, 고고학은 고고학, 미술사학은 미술사학대로 나름의 연구 방법론을 구축하여 학문 간의 교류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향후 문헌학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백제 왕흥사지 발굴 내용

본 논문의 주인공인 백제 왕흥사는 이러한 학문 간 소통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왕흥사는 사비시기의 사찰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의하면 法王 2년(600) 봄 정월에 창건하여 무왕 35년(634)에 완성되기까지 약 35년에 걸쳐 건립된 사찰이라고 한다. 건립 목적은 '王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왕권 강화 목적으로 건립되었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왕흥사에 관한 초기 연구 성과에서는 사료가 워낙 소략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성과는 기록상에서만 존재했던 왕흥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2007년 3월 28일에 시작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왕흥사지 제8차 발굴조사 결과 목탑지에서 사리기가 출토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사리공 내부에서 출토된 사리기는 청동사리합과 은제사리호, 그리고 금제사리병의 3중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청동사리합에 5자 6행 29자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왕흥사의 창건과 관련된 것으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丁酉年 2월 15일 백제왕 昌이 죽은 왕자를 위해 刹을 세웠다. 본래 사리가 2매였는데 봉안할 때 신의 조화로 3매가 되었다(丁酉年二月/十五日百濟/王 '昌(=昌)[1]' 爲亡王/子立刹本舍/利二枚葬時/神化爲三).



사진_백제 왕흥사지 사리기(출처:문화재청 홈페이지)

백제왕 昌은 威德王의 이름으로, 위 명문에 의하면 죽은 왕자를 위해 刹을 세웠다고 한다. 이는 법왕 2년(600)에 창건하기 시작하여 무왕 35년(634)에 완성되었다는 사서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위덕왕대의 정유년은 위덕왕 재위 24년(577)에 해당하는 시기로 창건하기 시작한 법왕대보다 23년이나 앞선 시기였다. 이를 토대로 왕흥사의 건립 연대에 관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발표함에 따라, 두 사서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물론 두 사서의 기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문헌사적 시도가 이루어진 반면, 고고학계에서는 문헌 기록을 단순히 기록의 오류로 판단하여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왕흥사에 대한 문헌사적 연구와 고고학적 연구는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왕흥사에 대한 문헌사적 연구가 한계에 봉착하여 더 이상의 연구 진전이 없는 반면, 고고학적 성과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연구 성과 역시 '백제왕 昌' 재위 24년(577)에 왕흥사가 건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면서 모든 연구 성과의 결과들이 위덕왕대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능사로 대표되는 6세기 중반에서 미륵사지와 제석사지로 대표되는 7세기 전반으로의 과도기적 양상의 형태를 왕흥사지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명문에 대한 재검토와 해석 시도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론적 해석을 배제한 뒤 고고학적 성과와 사리기 명문 내용을 재검토 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자료의 발견은 한국 고대사의 이해를 심화시켜주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헌 기록과의 연결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리기 명문에 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제8차 왕흥사지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청동사리합 명문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보다 23년이나 먼저 왕흥사가 축조되었음을 밝혀주는 근거가 되어왔다. 특히 명문의 '백제왕 昌(=昌)'은 왕흥사의 건립 시기를 위덕왕대인 577년으로 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그러나 왕흥사 목탑지 심초부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7세기의 양식에 가까우며, 명문 내용 역시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차단한 채 건립 주체를 '위덕왕'이라는 점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본고에서는 왕흥사 목탑지가 갖는 특성이 무왕대, 즉 7세기 전반의 양식과 유사하다는 점과 함께 명문의 '昌(=昌)'字를 '昌'이 아닌 '昌'字로 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명문의 내용을 새롭게 해석하였고, 사리합은 아들을 잃은 무왕을 위로하기 위해 당 태종이 하사한 물품이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물론 본고는 그간 명문 판독과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론적 형태의 문제제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와 문헌사적인 연구 성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昌(=昌)'는 '昌'과 '昌', 두 문자로 판독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동시 표기한 것이다.(편집자주)

동아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서강차이나 포럼

한 · 중 인문교류의 정치학
– 한국의 시각에서 –

전인갑 _ 사학과 교수

중국의 부상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성 있고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미 G2로 인정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 사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 동안 비약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정치, 경제, 군사 등 제방 면에서의 미국의 우산에 의존하면서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견고하게 지속할 것인가 혹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기존의 관계를 조정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봉착해 있다. 대중 관계를 강화한다면 그리고 대미관계를 조정한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이를 구체화할 것인가도 많은 사회적 갈등과 국제정치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된 '곤혹'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기획하는데 있어 반드시 해소해야 할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신흥대국론'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론으로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질서 속의 주도자를 넘어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의 편성 주체가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앞서 G2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취임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회의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꿈(中國夢)이라고 강조했다. 굴곡의 중국 근현대사 전개를 생각할 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강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흥대국'으로서 굴욕의 시대를 청산하고 과거의 중화제국을 연상케 하는 '강한 중국'의 국격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꿈은 반드시 중국의 길(中國道路)을 걸으며, 중국의 정신(中國精神)을 선양하고, 중국의 힘(中國力量)을 결집하여 실현해야 한다"고 하며 중국몽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Global Standard가 아닌 중국 고유의 표준에 근거하여 대국의 내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

변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

우리는 이를 보면서 '지역제국' 중국의 등장을 읽는다. '신흥대국' 중국의 등장은 명확하다. 여기서 동아시아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또 다른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과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향후 중국 중심으로 재구축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변화하는 지역질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말하자면 중국을 전략적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부과된 이러한 과제의 심층에는 19세기 후반 이후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흐름이 존재한다. 보편문명을 자부했던 중화제국의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가 붕괴한 이후 150여 년에 걸쳐 형성되었던 동아시아 질서가 최근 근본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대 미 · 일 대립의 구조가 정착해 가고 있고, 경제적 성취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각국 간의 헤게모니 경쟁 역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동이 야기한 불안정성이 역사인식 문제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이러한 변동의 중심에는 중국의 '지역제국화'가 자리 잡고 있다. 냉전시대라는 짧은 시기 동안 한국은 중국과 거의 무관하게 살아왔으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지구적 차원에서 제국적 기획을 시도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지역제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은 확고하다. 또한 우리를 포함한 중국의 이웃 국가들은 지역제국 중국이 만들어 낸 회오리 속으로 급속히 휘말려들고 있다. 오랜 한중관계 속에서 축적된 역사적 경험은 우리들로 하여금 중국의 이러한 동향에 대단히 민감하게 한다. 지역제국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기획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제국적 속성에 주목하는 현실적 이유, 즉 중국을 전략적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학문적 과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학문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제국 중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제국화의 주인공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민국가이다. 다원일체의 다민족 국가라는 국가통합 논리를 중국의 주장대로 수용하고, 그 영역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지역제국의 영역으로 전제한다면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는 현실적으로 중국적 제국질서(비대칭성을 본질로 하는 중국 중심의 질서)를 중심축으로 하는 중국 대 비중국이라는 구도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도를 학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재정의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중국과의 공동 번영을 견인하고자 하는 한국은 자신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출처: 베이징(중국)=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는 모습. (편집자주)

여기서 현재의 중국과 역사상의 중국에 대한 기존 인식을 해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인식의 해체는 역사상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를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중심과 복수의 부중심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동적인 복합질서로 재정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작업은 동아시아라는 지역 공간 속에서 '중화의 중국'을 포함하여 현재는 중국의 일부가 되어버린 역사상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 그리고 중국 제국의 이웃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교류와 갈등을 연출하면서 만들어낸 역사 전개의 다원성과 역동성을 복원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중국이 제국의 유산–제국의 영역, 지배전략, 운영시스템, 국제(조공)질서 등–을 근대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노정한 중국적 제국질서의 짙은 음영–중국 중심 위계적 질서 속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신강, 티벳, 몽골에 대한 한족 중심의 통치–을 걷어내고 공존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지향하는 역사상을 정립하려는 이론적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중국과 이웃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발전 단계 등의 측면에서 비대칭성이 매우 심했다고 전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중국인식이다. 그러한 비대칭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중국의 영역을 전제로 그러한 비대칭성을 부지불식간에 상정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문화, 영역, 정치 등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가변성–예컨대 중국 제국 영역의 가변성, 비중국 세계에 대한 중국의 의존성 등–이 무시되고 중국의 절대적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 사실과도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비대칭성을 고정불변의 속성으로 정의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의 관계를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혹은 조공질서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학계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을 상대화시키는 학문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화문화를 통한 현대 중국의 이해

한편 최근 10여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전통문화의 부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탁고적(托古的) 미래기획을 추구해 왔던 중국의 문화사적 관성을 생각할 때 놀랄만한 사실도 아니다. 이것은 중화문화가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현대중국에 대한 인식은 전통과 역사와의 단절에 강조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의 등장은 단절보다는 그 연속에 무게 중심을 두고 현대 중국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문정신 혹은 전통문화 부흥 논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국의 전통–특히 인문전통과 전통문화–이 다양한 차원에서 재구성되어 새로운 미래 건설에 활용되는 실태를 파악하여 그러한 현상의 현실적 ·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몽 실현의 방법으로 "중국의 길(中國道路)"과 "중국정신"을 강조한 것 역시 제국의 경험과 중화문화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사회적 흐름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성취와 G2로의 '굴기'는 근대 수용의 지식구조를 미래담론 창안의 지식구조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미국 주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중국 주도의 보편적 기준(Chinese Standard)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모색하고자 하는 대안은 '중국적 문화' 건설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1990년대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서구의 경제위기로 인해 중국인들은 민주 신봉을 타파하고 자신의 문화전통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단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위와 같은 현상의 중심에는 유교=전통문화=(중국의)인문전통이 자리 잡고 있다. 공자와 유교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여 선양하는 까닭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가치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써 유교=전통문화=(중국의)인문전통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속가능한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중화문화(인문전통, 유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과거를 모델로 미래를 기획하는 중국의 문화사적 관성을 생각할 때 유교적 통치 이념의 적극적 활용,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문화논쟁 및 전통문화의 부활 등 일련의 사회문화적 현상은 전통문화 혹은 중국의 인문(학)전통이 21세기 미래의 중국을 만드는 핵심적인 자원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주의에 입각하여 통치되는 국가를 이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이상을 실천해 왔던 문화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면 중국에서 전개되는 문화 논쟁이나 인문(정신)을 둘러싼 논의는 중국의 미래를 기획하기 위한 문화적, 지적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 모델이라는 새로운 보편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창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보편주의는 중국의 인문전통을 지적, 문화적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문전통 강조나 〈인문공동체〉 구상은 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생명문화연구소 봄철 정기 학술대회

호스피스 철학에서 웰다잉의 문제
: 에디트 슈타인을 중심으로

이은영 _ 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웰다잉' 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촉구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는 '웰다잉' 에 집중해 있는가? 필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오래 살지만 아프면서 오래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2012년 기준 60세 남성은 22년, 여성은 27년을 더 살 것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0여 년을 아프다가 사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선진국이 약 6년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거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 사실은 진료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2013년 고령층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50조 7426억 원)의 35%를 차지하며,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폐렴 등의 순이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말기 판정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는 갈수록 늘어 간다. 가족이 병 수발로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마침내 비참한 사건으로 이어진다. 둘째, 아픈 상황에서 빈곤의 심각성이다. 2013년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미만 인구)은 48%로 전체의 3.3배이며 이는 곧 OECD 국가 중 60세 이상의 자살률이 최고라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 평가에서 40개 국가 중 32위라고 밝혀지고 있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0).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들어 '웰다잉'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연구자들의 다양한 '웰다잉' 연구의 다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물론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호스피스 철학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의 본격적 수행을 예비하는 최근의 몇 가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은 눈여겨 둘만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호스피스' 내지는 '호스피스 활동' 이 아니라 왜 '호스피스 철학' 인가? 또한 인간을 탐구하는 철학은 죽음에 대하여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그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 접근 방법은 다른 분야의 방법과 어떠한 차이를 견지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본 글을 출발한다.

호스피스 철학

호스피스(Hospice)의 어원은 '손님을 집에서 정중하게 모셔 후대 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의학사전에서는 '죽어가는 사람과 가족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영적 간호의 형태로 고식적이고 지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공시설' 로 명시하고 있으며 숙소나 집의 의미보다 임종환자 내지 그 가족을 포함하는 사람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집과 사람이라는 양자를 함께 '집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때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의미는 그가 하루속히 성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야 하는데 심신의 피로로 인해 하룻밤 쉬어야 하거나 혹은 신병으로 떠나지 못한 채 며칠 동안 숙소에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더욱이 이들을 돌봐주고 간호해 주는 정중한 마음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전인적 돌봄' 이라고 할 수 있다. 호스피스의 현대적 정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다.(...)따라서 호스피스는 임종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희망 속에서 가능한 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전념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총체적 접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병 뿐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갖고 있으므로 호스피스는 이러한 육체적인 치료와 영적 치료를 같이 해주는 전인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죽어가는 환자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돌보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는 주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며, 하나의 운동 내지는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호스피스 운동' (Hospice Movement)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호스피스 정의를 토대로 백승균 교수는 다음과 같이 '호스피스 철학' 을 규정짓는다. 그에 의하면, "호스피스는 순례자나 병약자를 돌보기 위해 '간호' (시간)하는 일과 그들을 편히 쉴 수 있도록 '숙박' (공간)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호스피스에 있어서는 순례자와 병약자를 위한 숙박과 간호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리는 이 '숙박' (공간)의 개념과 '간호' (시간)의 개념을 인간존재라는 바탕에서 철학의 기본범주인 '시간' 과 '공간' 의 개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를 '호스피스 철학' 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백승균에 의하면, "호스피스 돌봄 보다는 '호스피스 철학' 이라고 명명하고, 인간존재와 생명현상,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존엄성이 무엇인가를 호스피스 철학의 이념으로 제시한다. 호스피스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인간이고, 인간의 삶이며 또한 그러한 인간 삶의 중심축이 바로 인간의 실존임을 주장함으로써 호스피스 활동이나 돌봄 보다는 호스피스 철학"임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백승균의 논의를 적극 지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부가하고자 한다. 즉 호스피스에 있어서 순례자나 병약자를 돌보기 위한 '간호(시간)' 와 그들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숙박(공간)' 이라는 기본범주를 토대로 간호하는 호스피스와 간호를 받는 환자 사이의 '관계(태도)' 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인간존재라는 바탕에서 재해석하려는 것이며, 이를 '호스피스 철학' (Hospice Philosophy)으로 규정짓고자 한다.

호스피스 철학의 정초로서 사랑과 공감

필자는 슈타인의 박사논문 『감정이입의 문제』에서 제시되었던 감정이입(EinfŸhlung)의 한 측면인 '하나로 느낌' 과 '더불어 느낌' 을 통하여 호스피스 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해 내고자 한다. 우선 감정이입의 한 형태로서 제시된 '하나로 느낌' 이다. 슈타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곡예사와 '하나(eins)' 가 아니라, 단지 곡예사 '곁에(bei)' 있을 뿐이다. 나는 곡예사의 행동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즉 곡예사의 행동을 나는 외적으로는 실행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함께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곡예사를 '고유한 자아' , 지켜보고 있는 나를 '낯선 자아' 라 할 때, 낯선 자아가 고유한 자아의 움직임을 함께 실행하지 않아도 낯선 자아는 고유한 자아와 내적으로 함께 하면서 내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로 느끼게' 된다." 이러한 '하나로 느낌' (EinsfŸhlen)에서는 '우리' 가 하나로 느낌의 주체이기 때문에 '나' 의 기쁨과 '너' 의 기쁨, 그리고 '그' 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유지되며 따라서 '우리' 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호스피스는 임종하는 환자의 곁에 있으며, 임종자의 고통스러운 행동을 외적으로 직접 실행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감정이입하면서 함께 함으로써 '하나로 느끼게' 될 수 있다. 임종자의 고통을 하나로 느끼려 하는 호스피스의 태도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더불어 느낌' 이다. 슈타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컨대 A가 시험에 통과했고, A는 이 일에 (시험에 통과한 결과에) 대해서 기뻐한다, A의 친구인 나도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대상이 A의 기쁨 그 자체가 아니라 A가 시험에 통과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 기쁨은 A가 시험에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 A와 내가 함께 기뻐함이 된다. 이것이 곧 '더불어 느낌' 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A가 기뻐하고 있는 그 사건(A가 시험에 통과한 사실)에 나를 옮겨놓는 것이며, 이때 나는 A의 기쁨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A와 더불어 기뻐하고(느끼고) 있는 것이다.(PE, 13-14)" 마찬가지로 호스피스는 임종자의 고통에로 자신을 옮겨 놓으며, 임종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대하여 '더불어 느낌' (MitfŸhlen)으로써 임종자의 호소에 응답하며 임종자로 하여금 친밀감과 가까움이라는 정서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감정이입의 한 형태로 제시된 '하나로 느낌' 과 '더불어 느낌' 의 근저에는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감정에 대한 철학적 가치는 슈타인의 주저『유한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전반에 걸쳐 감정이 존재에 접근하는 유효한 방법임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인간을 실례로 살펴보자면, 전쟁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감정을 기술한다. 군대는 거리를 따라서 열을 지어 행진한다. 그들은 경험이 없는, 차별이 없는 무리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엄마와 약혼자는 개개의 군인을 본다. 여기에서 논점은 '사랑' 이라는 감정이 병사들의 통일된 본성(동일성)보다는 이성적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의 차별성을 보게 해 준다는 것이다. 통일된 본성은 궁극적으로 신의 전능한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 은 병사들의 통일된 본성(동일성)보다는 개개인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이는 곧 임종을 앞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환자들이라는 동일성 보다는 개개인의 차별성을 통하여 그 고통과 괴로움을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나가는 말

2014년 설문조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86%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2015년 3월) 암 사망자의 13%만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말기환자는 그들의 바람과 달리 고가의 검사와 처치로 고통을 받으며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위한 돌봄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호스피스 국민본부는 '웰빙의 마무리는 웰다잉' 이며 '호스피스 제도화로 말기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호스피스 제도 도입과 함께 말기환자 완화의료 등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정부는 웰다잉에 관한 범부처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약속하였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웰다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말기 판단시점부터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을 보장하고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만일 오늘날 개인이 치유를 필요로 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뿐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몸과 감각적 측면 그리고 영혼과 정신적 측면의 상관관계 속에서 문제를 직시해야 함을 강조하는 측면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결국 인간의 죽음은 육체만의 문제라고 지정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영혼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웰다잉의 핵심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관점의 웰다잉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런 한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슈타인의 호스피스 철학에서 웰다잉 문제는 우리 사회의 좀 더 성숙한 죽음 문화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015 원우한마당

오늘 할 운동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